

[종합·해설]

교과부 돌연 태도 변경은 '우편향'?

■ 해념기는 조선대 정상화

사학법 재개정도 구 경영진 유리

사학분쟁조정위도 제역할 못해

조선대 법인 정상화 방안이 올 1월 2일 정부에 제출된 이후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조선대 정의사 체제 전환의 키를 쥐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28일로 설립 1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상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를 나누며 조선대 등 4개 대학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소득 없이 시간만 보냈다.

◇교과부 정상화 의지 있나=애초에 조선대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교과부다. 교과부는 지난 2005년 임시 이사 체제의 조선대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를 마친 뒤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곳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조선대에 정상화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과 함께 사분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올해 교과부는 정상화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회 전반에서 감지되는 '우편향' 기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의 철학이 학교를 사학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사분위의 부결로 좌절되긴 했지만 최근 교과부가 제출한 조선대 임시이사 명단에는 구 경영진측 인사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 사학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는 것은 사분위이지만, 삼급기관이 교과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 같은 기류 변화가 정상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등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사학법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 경영진이 정상화 논의를 지원시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학법 재개정은 구 경영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대한 논의가 지연돼 현 사분위의 임기

(2009년 12월)가 만료돼 구성원이 바뀌게 된다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체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 1년간 뭐 했나=사분위는 그동안 28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는 분쟁 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업무를 해왔으나, 조선대 등 4개 정상화 추진 대학 정의사 선임은 제자리 걸음이다.

사분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기한 연장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안건 접수 후 1년이 흘렀다.

사분위는 회의를 거치는 동안 협조선대 측과 구 경영진 측 대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또는 합의를 조정하기 위해 최소한 7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 경영진측의 불참으로 양측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단 두 차례 뿐이다. 이마저 정해리시(박철웅 전 총장 부인)씨 대리인이 있다.

설상가상 사분위는 이달 초 교과부의 임시이사 재파견안을 부결하면서 내부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정규회 위원장이 안건 부결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분위는 정 위원장 사퇴 이후 한 달여가 되도록 새 위원장을 뽑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정상화 논의는 위원장 선임 이후로 늦춰지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열린 제28차 회의에서도 위원장 선임 문제만 논의하고 끝났다.

사분위 제29차 회의는 29일 열린다. 조선대 관계자는 "다만 특별소위는 정의사 9명 중 6명을 우선 선임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상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조선대 정상화 일지

| | |
|--------------|---|
| 1988. 1. 8 | 재단 횡포에 항거한 조선대 교수 및 학생들 농성 113일째 공권력 투입 |
| 1988. 2. 4 | 문교부, 종합감사(1997년 말) 실시 후 이사 해임 및 임시이사 파견 |
| 1988. 9. 6 | 구성원 추대에 의해 조선대 제2대 총장으로 이운명 변호사 취임 |
| 2006. 4. 12 | 교육인적자원부, 조선대에 정상화방안 요구 |
| 2007. 12. 28 | 시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 2008. 1. 2 | 조선대법인 학원정상화 방안 제출 |
| 2008. 5. 8 | 시학분쟁조정위 소위원회에서 구성원과 구 경영진 의견 청취 |
| 2008. 6. 30 | 조선대법인 임시이사 임기 만료 및 이사부증재 시작 |
| 2008. 8. 14 | 시학분쟁조정위 조선대 관련 특별소위 구성 |
| 2008. 8. 28 | 조선대법인 긴급사무처리권 발동 이사회 개최 |
| 2008. 12. 4 | 정규회 시학분쟁조정위원회 시의 표명 |
| 2008. 12. 29 | 시학분쟁조정위원회 제29차 회의 |



조선대 법인 정상화 방안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조선대 교직원들이 지난 9월 26일 학교 본관 현관 앞에서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시도의 즉각 중단과 정의사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회고 2008

② 민주당 총선 참패

여대야소 … '호남 고립' 가속화

을 4월9일 치러진 18대 총선은 전년도 대선에 이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여대야소' 구도를 만들었다. 물론 한나라당은 이른바 안정 과반의 의석, 즉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를 넘는 의석 168석 이상을 얻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과반의석인 158석 정도를 얻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7월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의 복귀로 한나라당은 172석의 '공룡여당'으로 재탄생했다.

민주당은 애초 70여석의 최악의 전망을 깨고 81석(지난 8월 박지원·김영록 의원 복당으로

12월 현재 83석)을 얻어 개헌자지선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견제야당'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덫발인 광주·전남 20개 지역구에서 16명의 당선자를 내며 체면을 유지했으나 한나라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무소속 후보가 4명이나 당선돼 풀풍을 일으켰다.

이처럼 민주당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 18대 정치권은 현안마다 이념대결의 양상을 보이며 1년을 정쟁으로 보냈다. 때문에 여당인 한나라당도, 제1 야당인 민주당도

뒤에도 원구성을 못해 82일 동안 공전했으며 쇠고기 국정 조사와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어느 것 하나 못 밟하고 끝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의 갈등 속에 법정 시한을 또다시 넘겨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야당의원들을 배제한 채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 처리함으로써 폭력사태까지 불렀다.

더욱이 금산분리 등 경제규제 완화 법안 및 국정원법, 통신비밀법, 북한 인권법,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본회의장 및 일부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 연말 국정도 파행으로 얼룩지게 됐다.

영남을 덫발로 하는 한나라당의 거대화와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총선 패배, 나아가 민주당의 역할 부재는 호남 배제로 이어졌다. '호남의 설움'은 '로스쿨·국가산단·부품소재 전용 공단 지정' 등 각종 국책사업에서 이 지역이 배제되면서 가속화됐으며 결국 '5+2 광역경제권 설정'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대강 설명회' 등 공무원 소집 논란

'경제난국 극복' … 광주·전남 210명 참가

정부가 현안 업무가 산적한 연말에 조기집행 방안', 국토부 1차관이 '4대 강 재탄생사업'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80명(본청 50명,

5개 구 30명)을 비롯해 전남도 130명(본청 70명, 22개 시·군 60명)의 간부

공무원들이 이날 현안업무를 제쳐두고 상경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지난 22일 행

안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직후 16개

시·도에 전격 통보된다. 불참 공무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토록 해 사실상

"강제소집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에도 전국

읍·면·동장 3천300명을 소집해 국정현안 설명회를 가져 논란을 빚었었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자치단체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반강제적으로 소집해 정부정책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다"며 "바쁜 연말에 공무원들이 막대한 출장비를 써가면서까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도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번 행사는 횡일적 지침을 통해 모든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군사문화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